

제47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

일본의 납치 외교와 여론 형성

호리야마 아미코(堀山明子)

고이즈미 정권 시 2002년 고이즈미가 방북했을 때, 납치 피해자들을 데려왔고 북한의 김정 일 주석이 납치사건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베수상이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보고하고, 이 사건을 중심으로 완수함으로써 좋게 평가되었고, 이번 수상이 된 배경으로도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●납치문제가 인정 받을 때까지의 경과 (5단계)

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는 11건, 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. 그 이외 납치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 단체는 더 많은 피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①문제 발생, 단편 정보기(77-85년)

-77년~80년 사이에 납치 사건이 일어났지만 증거가 없었음. 납치 사건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.

-80년 1월 産経신문이 「アベック3組なぞの蒸発」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방 불명된 사건을 나열하면서 외국에서 조작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최초로 제시.

②증거발견, 문제제기기(85-97년)

-북한의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계기는 85년 6월, 한국이 북한 공작원이었던 신광수(辛光洙)를 일본인 原씨를 납치한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사건. 그러나 한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, 사건을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음.

-88년 1월 KAL 폭파 사건의 김현희(金賢姬)가 「일본어를 가르쳐 준 교육계 이은혜(李恩惠)는 일본인 여성」이라고 증언한 사건은 일본 여론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.

-88년 3월, 국회공안위원장이 참의원산의원회에서 「アベック不明は北朝鮮による拉致の疑いが濃厚」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.

-90년 9월, 자민당·사회당·조선노동당에 의한 「3당공동선언」으로 「전후 보상」을 포함해, 북일국교정상화교섭 개시에 들어갔다.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정 부간 확인 불가능.

-95년 3월, 여당 3당 방북단들이 쌀 50만톤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관계개선에 나섬.

③납치의혹, 정부인정기(97-02년)

-97년 11월 여당 3당 방북단들이 북한에 「行方不明者の調査」를 표명. 납치 문제,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었음.

④납치교섭, 피해자 탈환기(01-04년)

-2001년 4월, 고이즈미 정권 탄생.

<정치외교를 둘러싼 정치적 구도의 변화>

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정치는 55년 체제 현상으로 인해, 보수와 혁신구도 아래 일관성 결여. 그러나 55년 체제가 무너지면서, 자민당(보수)와 사회당(혁신)이 대립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. 납치문제에 있어서도 큰 전환이 이루어짐.

-북한 김정일 주석이 납치문제를 인정. 생존자 확인. 사망자에 대한 의혹. 생존자(5명)가 일본에 돌아옴.

⑤납치교섭, 구조 전환기(04~)

-정부와 미디어 인식의 변화

납치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탈환시켜야 한다는 인식 형성. 의혹보도의 한계와 반성.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인정하고 조사를 진전시켜야 함.

●아베정권의 과제와 이후의 방향

-납치문제해결의 정의란, 피해자인성을 둘러싼 지원단체와의 갈등.

-당면은 북핵문제 우선. 북일관계의 개선이 과제.